

5년간 섬유 패션산업에 1.4조 투입… ‘그린·디지털’ 입힌다

산업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상반기 섬유패션 수출 19.1% 급감

환경친화적 전환, 연대와 협력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4개 전략 제시

정부가 섬유패션산업의 그린·디지털 혁신을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제34회 섬유의 날’ 행사를 열고, 2026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섬유패션산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내수와 수출에서 정체기인 국내 섬유패션산업을 친환경,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전환하고, 3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원사·원단·염색·봉제 등 균형있는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4만8000개 기업 중 88%가 10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부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도·소매업 등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종사자가 83만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국내 섬유패션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생산은 2011년 49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원

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하락, 해외 이전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수출 역시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국의 해외시장 잠식과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생산부진, 수출 단가 하락 등이 겹치며 전년동기대비 19.1%나 급감했다.

섬유패션산업 고용은,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 직접비 상승에 따른 해외 이

전 등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취업 기회에 따른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하고 기술투자도 부족해 선진국과는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반면, 개도국의 추격을 받는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전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 ▲첨단기술로 안전한 사회구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소재와 공정기술 개발, 클린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분해성 섬유, 리사이클 섬유 등 친환경 섬유 소재 개발 등에 390억 원을 투입한다. 공정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염색 업종은 설비진단과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해 그린·클린팩토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섬유 원료 개발 연구

센터와 미래 자동차용 경량 복합재 생산기술 개발 연구센터도 각각 짓는다.

생산·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코로나19로 개인보호장비 시장이 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K-방역 제품’ 생태계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K 방역용 휴먼케어 섬유 소재 개발에 200억 원을 투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안전 장갑·보호복 등 안전 보호 섬유 제품의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 28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국가 주요 산업”이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혁신을 통한 변화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위기에 강한 산업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궁에 찾아온 가을풍경

11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을 찾은 시민들이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오늘 美 바이든과 전화통화

변함없는 한미동맹 등 확인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 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정상 통화 관련 질문을 받은 가운데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정상 통화에서 변함 없는 한미동맹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통화 일정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선언한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련 언급은 자제해 왔다.

다만 이날 일본 언론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 간 정상 통화 추진 내용이 보도되자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밝히게 됐다. 이와 관련 스가 총리는 이르면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시작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이어 정상 통화를 가졌다.

이 가운데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미국의 유럽 핵심 동맹국으로 꼽힌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유럽 핵심 동맹국과 통화에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 복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한달새 가계대출 10조 폭증… 역대 두번째

한은, 신용대출·주담대 증가세 가팔라
주담대 6.8조, 기타대출 3.8조 증가

지난달 가계대출이 10조원이 넘게 급증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 매매와 전세 수요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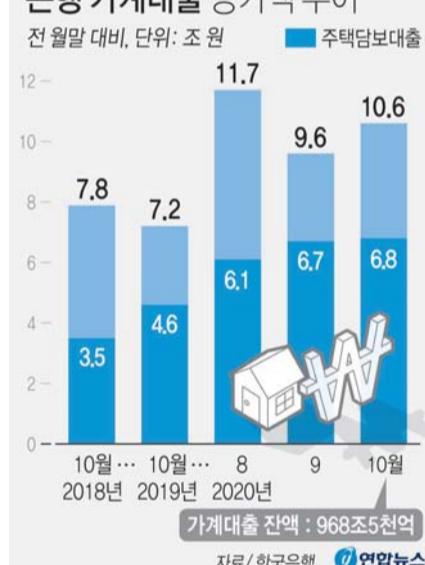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000원으로 한 달 사이 10조6000억원이 늘었다. 증가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올해 8월(11조7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많으며, 매년 10월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치다.

먼저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8월 6조1000억원, 9월 6조7000억원에 이어 섣달 연속 6조원대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3조원 규모다. 역시 8월 3조4000억원, 9월 3조5000억원에 이어 3조원대가 유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에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의 실행이 이어지면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했다”며 “전세 거래량이 줄더라도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전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한 달 사이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9월 3조원보다 더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이 주택과 주식 자금수요에 추석 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증

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달 13조2000억원이 늘었다.

제2금융권은 계절요인의 영향으로 카드대출 등을 중심으로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4분기다. 과거 분기별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4분기가 증가폭이 가장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4분기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서민·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역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10월 중 은행 기업대출(원화) 증가폭은 9조2000억원으로 전월 5조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기업대출이 전월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중소기업대출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기업 자금수요 등이 반영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정의연대 “라임사태 책임, 금융사에만 전가해선 안돼”

» 1면 ‘라임 판매 증권사…’서 계속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재위 결과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소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재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향후 (징계안 최종 확정까지) 증선위, 금융위 결과까지 계속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입장

이다. 지금 선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의 제재위 결과를 환영하지만 책임을 오롯이 금융사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당국의 책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가 지배구조법률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CEO를 제

재하기엔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법률 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나재철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적용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